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96호
2017. 2. 6

정책동향

▣ 통계로 본 건설 사망 재해 현황 및 정책 과제

시장동향

▣ 1월 CBS,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4.7p 기록

산업정보

▣ 2016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과 시사점

▣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동향과 전망

▣ 일본의 건설 유지·보수 시장 현황과 전망

건설논단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통계로 본 건설 사망 재해 현황 및 정책 과제¹⁾

- 타 산업 대비 건설산업의 사망만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 국내 건설 안전사고 현황 파악은 재해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

- 안전보건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93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 산업 사망 재해자 1,810명의 27.2%를 차지하는 수치임.
 - 건설산업 사망만인율²⁾은 1.47‰로 전 산업 사망만인율 1.01‰보다 1.45배 높음. 이는 2015년 건설근로자가 사망할 확률이 전 산업 평균보다 1.45배 높았음을 의미함.
- 본고에서는 국내 및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사망 재해 통계 자료(2010년~2014년)³⁾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건설 안전사고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가별 사망 재해 통계 자료는 한국의 안전보건공단, 미국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영국의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 싱가포르의 Ministry of Manpower(MOM)에서 수집함.
 - 산업재해 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대표적인 지표인 재해율은 국가별로 재해보고 기준이 상이하여 비교·분석에 애로사항이 있음. 본고에서는 사망 재해 통계를 중심으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국가별 사망만인율 비교·분석 결과<표 1> 참조

- 국내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4년 국내 건설산업 사망만인율 1.50‰은 2010년 1.91‰에 비해 21.5% 감소되었으나, 영국(25.0%)과 싱가포르(32.1%)에 비해 성과가 낮았음.
 - 5년 평균(2010~2014년) 국내 건설산업 사망만인율 1.88‰은 미국(0.97‰)의 1.9배, 영국(0.22‰)의 8.7배, 싱가포르(0.64‰)의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전 산업 사망만인율은 5년간 타 국가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으나, 사망 재해가 일어날 확률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사망만인율만 고려해 볼 때, 국내 전 산업 사망만인율은 2010년 1.55‰에서 2014년 1.08‰로 약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최수영 외 2인(2017),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3) 일부 국가의 2015년 재해 통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함.

30.3% 감소되었음. 이는 미국의 2.1%, 영국의 22.4%, 싱가포르의 18.8% 감소 폭과 비교하여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5년 평균 전 산업 사망만인율 1.31‰은 미국의 3.5배, 영국의 31.6배, 싱가포르의 6.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가별 건설산업 간 사망만인율 차이(최대 8.7배)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상대적 건설산업 사망만인율⁴⁾을 분석한 결과, 국내 건설산업과 전 산업 사망률 차이는 타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5년 평균 상대적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을 보면, 국내 건설산업 사망률은 전 산업 대비 1.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미국(2.64배), 영국(5.25배), 싱가포르(3.04배)에 비해 낮은 수치임.

<표 1> 국가별 사망만인율 분석 결과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평균
건설산업 사망만인율(‰)	한국	1.91	2.01	1.78	2.21	1.50	1.88
	미국	0.98	0.91	0.99	0.97	0.98	0.97
	영국	0.25	0.19	0.21	0.24	0.19	0.22
	싱가포르	0.81	0.53	0.59	0.70	0.55	0.64
전 산업 사망만인율(‰)	한국	1.55	1.47	1.20	1.25	1.08	1.31
	미국	0.38	0.37	0.36	0.35	0.37	0.37
	영국	0.05	0.05	0.04	0.04	0.04	0.04
	싱가포르	0.22	0.23	0.21	0.21	0.18	0.21
상대적 건설산업 사망만인율	한국	1.23	1.37	1.48	1.77	1.39	1.45
	미국	2.58	2.46	2.75	2.77	2.65	2.64
	영국	5.06	4.27	5.44	6.58	4.89	5.25
	싱가포르	3.68	2.30	2.81	3.33	3.08	3.04

■ 국내외 사망 재해 분석이 주는 시사점

- 국내외 모두 건설산업의 사망만인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그 차이는 국내의 경우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와 해외 모두 건설산업 분야의 사망재해 발생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음을 반증하며, 상대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안전 예산, 안전 교육 등에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임.
 - 건설산업과 전 산업의 사망만인율 차이는 각 나라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상대적 건설산업 사망만인율 분석 결과는 국내 산업구조가 선진국들에 비해 후진국 수준임을 암시함.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4) 상대적 건설산업 사망만인율=건설산업 사망만인율/전체산업 사망만인율. 즉 상대적 건설산업 사망만인율 1.00이상은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이 전체산업보다 높음을, 1.00이하는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이 전체산업보다 낮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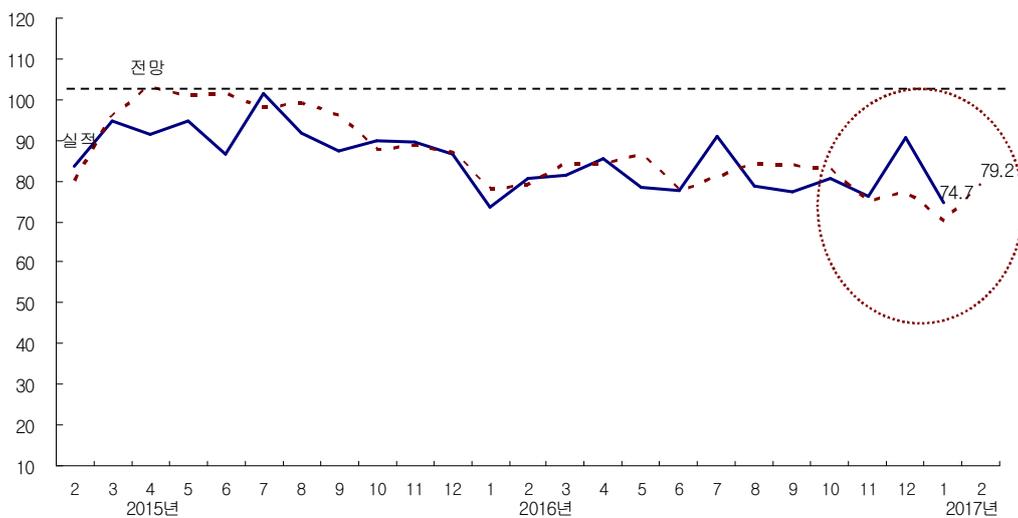
1월 CBSI,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4.7 기록

- 2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 1월 CBSI, 연초 공사 발주 물량 감소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

- 2017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그림 1>과 같이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4.7을 기록함.
 - CBSI는 2016년 8~11월 동안 70선 중·후반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 5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는데, 2017년 1월에 다시 하락함.
 - 특히 CBSI가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것은 지난 2015년 1월(15.9p 하락) 이후 24개월 래 가장 큰 폭의 하락임.
 - 이는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CBSI가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올 1월에도 작용했고, 11.3 대책 발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CBSI 회복세를 견인했던 주택 부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특히, 신규 공사 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주택 공사 수주 지수가 전월 대비 19.7p나 하락해 1월 CBS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지수 하락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함.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5.4p 하락한 84.6을 기록, 1개월 만에 다시 80선으로 하락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3.2p 하락한 77.4를 기록, 1개월 만에 다시 70선으로 하락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 대비 19.6p 하락한 60.0을 기록, 기업 규모별로 가장 낙폭이 컸으며, 1개월 만에 다시 60선으로 하락함.

<표 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6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1.4	85.6	78.5	77.6	91.0	78.6	77.2	80.7	76.1	90.6	74.7	70.0	79.2	
구 모 별	대형	100.0	100.0	83.3	76.9	100.0	100.0	100.0	100.0	84.6	100.0	84.6	66.7	84.6
	중견	83.3	83.8	85.3	90.9	103.0	78.8	76.7	78.8	75.8	90.6	77.4	81.3	80.6
	중소	57.4	70.8	65.2	63.3	66.7	53.2	51.2	60.4	66.7	79.6	60.0	61.2	71.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7년 2월 전망치, 1월 실적치 대비 4.5p 상승한 79.2

- 2017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4.5p 상승한 79.2를 기록함.
 - 2월 전망치가 1월보다는 양호하나, 전망치가 기준선에 훨씬 못 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들은 2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통상 2월까지의 공사 물량이 많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로서는 2월에도 특별히 건설경기를 개선할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2016년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의 특성과 시사점⁵⁾

- 다양한 외부 자원의 활용 극대화와 조직 내 저항 극복이 관건 -

■ 2016년 글로벌 5대 혁신 기업 : Apple, Google, Tesla Motors, Microsoft, Amazon

-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이 발표한 2016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 순위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미국의 애플(Apple)사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함.
 - 이번 조사에서는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과 같은 새로운 기업들의 등장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이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다임러(Daimler) 등과 같은 전통적 제조기업과 프 로세스기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 주도(technology-driven) 여부와 상관없이 혁신적인 기업들은 신기술 동향과 해당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표 1>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1	Apple	18	DuPont	35	Xiaomi
2	Google	19	Dow Chemical	36	The Walt Disney Company
3	Tesla Motors	20	Basf	37	Hilton
4	Microsoft Corp.	21	Airbnb	38	Renault
5	Amazon	22	Under Armour	39	NTT Docomo
6	Netflix	23	Gilead Sciences	40	Intel
7	Samsung Group	24	Regeneron Pharmaceuticals	41	Marriott International
8	Toyota	25	Cisco Systems	42	3M
9	Facebook	26	Pfizer	43	Dell
10	IBM	27	General Motors	44	Orange
11	Bayer	28	JP Morgan Chase	45	Siemens
12	Southwest Airlines	29	Johnson and Johnson	46	Huawei
13	Hewlett-Packard	30	AXA	47	Bristol Myers Squibb
14	BMW	31	Nike	48	Honda
15	General Electric	32	Expedia	49	BT Group
16	Daimler	33	Allianz	50	Procter & Gamble
17	Uber	34	SpaceX		

주 : 적색으로 표시된 기업은 2016년에 새롭게 순위 내에 진입한 기업임.

5) Boston Consulting Group의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6”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2위부터 4위까지는 구글(Google), 테슬라(Tesl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로 2015년 조사와 동일하지만 5위를 기록했던 삼성(Samsung)은 7위로 하락함. 또한 넷플릭스(Netflix), 페이스북(Facebook), 아이비엠(IBM) 등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함.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익스페디아(Expedia), 스페이스엑스(SpaceX), 샤오미(Xiaomi), 힐튼(Hilton) 등 15개 기업이 새롭게 2016년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에 포함됨.

■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선 내·외부 데이터 활용의 확대와 조직 내 저항 극복이 관건

-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multiple data sources) 활용에 적극적이뿐만 아니라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새로운 혁신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특허, 논문 및 벤처 펀딩 데이터베이스, 의미론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외부 자원 중 활용 가능한 것들을 구분하고 예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조사된 기업들 중 약 80%가 외부 자원을 포함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과 상품 등과 관련된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사업 분야 개척 및 정보 제고, 시장 동향 파악, 시장 생태계 이해, 혁신 역량을 가진 외부 전문 인력 파악, 혁신 지속을 위한 투자 결정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응답함.
 - BCG에 따르면 혁신은 기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금융서비스, 미디어,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지속되고 있음. 또한 벤처 캐피탈 기업, 혁신 랩,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혁신 지원 모델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신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고 혁신 지속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기업들은 내부적 저항을 경험하게 됨.
 - 기존 방식에 대한 익숙함과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외부 혁신 기술의 도입에 위협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혁신에 따른 혜택을 경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 조직 내부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매트릭스 구축이 요구됨. 우선 내부 및 외부 혁신 자원의 도입에 기여한 개인과 조직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저항을 최소화해야 함. 또한 혁신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비전과 시각을 정립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외부의 혁신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조직 인프라(organization's infrastructure) 구축이 필요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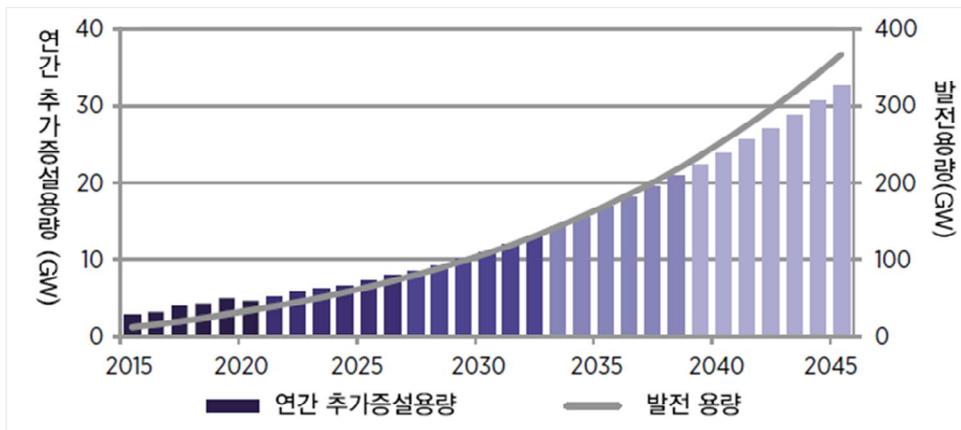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동향과 전망

- 최근 경제성 확보로 인한 사업기회 증대에 따라 건설기업의 관심 확대 필요 -

■ 최근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특성 및 전망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 따르면, 앞으로 30년간 해상 풍력발전은 신 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진단함.
 - 최근 발간한 보고서⁶⁾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생산량은 2015년 기준 14GW에서 2045년 400GW로 약 3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1> 참조).
 - 해상풍력발전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설치·운영비용이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확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⁷⁾이며, 이미 육상 풍력발전과 기술과 비용 경쟁에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함.

<그림 1> 전 세계 해상 풍력발전 생산량 전망(2016~2045년)



자료 : IRENA(2016), Innovation Outlook Offshore Wind.

■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발전 사업 동향

-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발효된 신기후체제(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불가피하며,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하였기에 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 풍력발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
 - 정부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약 8GW 풍력발전(육상+해상) 설비 설치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이은 정책 발표⁸⁾을 통해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

6)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IRENA), Innovation Outlook Offshore Wind, 2016. 10.

7) IRENA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기술개발로 인해 MW당 발전원가는 현재 170.47달러에서 2030년 95.28달러, 2045년 70.72달러로 낮아져 높은 경제성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례·내규 제정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현재 계획 혹은 진행 중인 해상 풍력발전은 2016년 12월 전기사업허가 기준 21개소 약 3.3GW 규모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사업계획이 추진 중임.

- 하지만 해상 풍력발전은 화력 등 기존 전통적 발전 대비 친환경적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 및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최근 인·허가 지연 등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부산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540MW)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 부족과 해상관광자원 개발 필요로 인해 해당 지자체(기장군)가 반대하고 있음. 울산 북구 해상 풍력발전단지(196MW)도 어획량 감소 우려로 어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미 해상 풍력발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또한 해양 환경단체가 해양 생태계 훼손과 제주 남방 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어업 피해가 예상 되어 추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 새만금방조제 해상 풍력발전(99.2MW)도 경제적 파급효과 불투명과 단순 전력생산시설 유치로 인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 우려로 인해 전라북도청과 군산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함.

■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 육상 풍력발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건설부지가 한정되어 사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해상 풍력발전은 각국이 해상풍력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⁹⁾.
- 해상 풍력발전은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산업(중공업)의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인·허가 간소화 및 기타 지원책 등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상 풍력발전 선진국(덴마크, 영국 등)과 유사한 지원책을 사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수준 또한 높은 편임.
 - 실적 확보를 위한 사업 신규 발굴,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 및 연구 결과 공유, 대형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건설사가 주도하는 해상 풍력발전 사업은 일부 대형사(SK, 대림 등)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확보 및 해외 진출 확대를 고려하여 해상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우리 건설기업의 관심 확대 및 사업 기회 모색이 필요할 것임.

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8)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2016.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2016.11.),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2017.01) 등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발표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SMP(전력시장 가격)를 합산한 20년 장기 고정가격제도 덕분에 투자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9) Global Wind Energy Council(GWEC),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16. 2016.11.

일본의 건설 유지·보수 시장 현황과 전망

- 유지·보수 공사 2014년 전체의 27.9%, 노후 인프라 정비 강화로 향후 증가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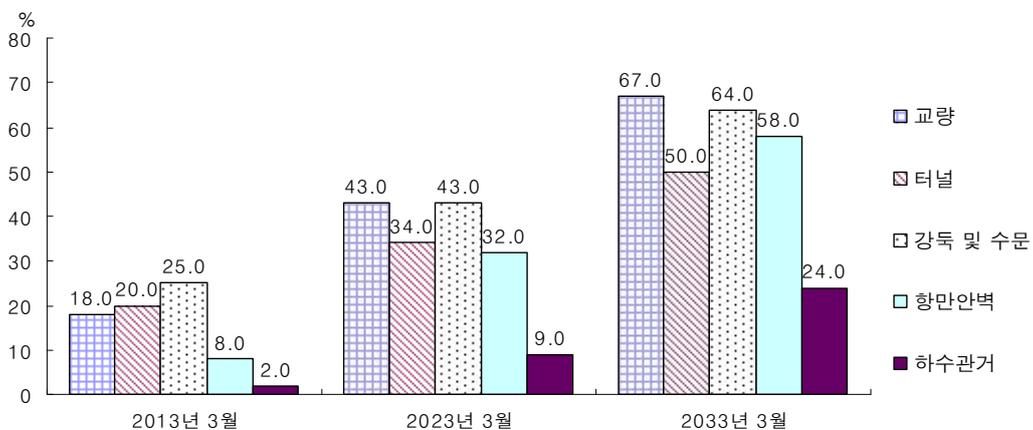
일본 2012년 12월 사사고 터널 사고 이후,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시각 변화

- 일본 정부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의 중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2년 12월 사사고 터널(笹子トンネル) 천장 붕괴 사고 이후임¹⁰⁾.
 - 사사고 터널은 중일본(中日本)고속도로 소유의 35년 이상 된 노후 터널로, 사고 전 3개월 전에 안전검사를 시행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9명이 사망함.

일본의 사용연수 50년 이상 된 주요 SOC 노후 인프라 비중과 전망

- 2013년 3월 기준, 사용연수 50년 이상 된 주요 SOC 시설물 비중은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향후 20년 간 노후 시설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교량의 경우 준공 된지 50년 이상 된 시설물의 비중은 2013년에 18.0%에서 10년 후인 2023년 43.0%로 급격히 증가하고 2033년에는 67.0%를 기록할 전망이다.
 - 터널의 경우 준공 된지 50년 이상 된 시설물의 비중은 2013년에 20.0%에서 2023년에 34.0%를 기록하고, 2033년에 50%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1> 일본의 50년 이상 된 주요 SOC 인프라 비중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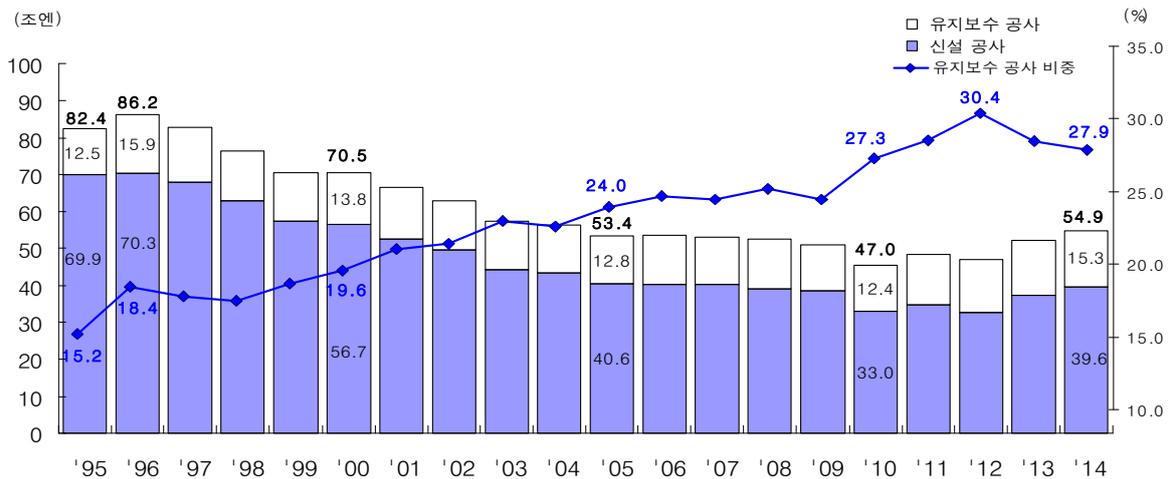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주 : 건설연도가 불분명한 시설물은 미포함(교량 30만개, 터널 250개, 항만 안벽 100개 등).

10) 일본은 앞선 2003년 노후 인프라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사사고 터널 사고 이후, 2013년을 “사회자본 유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인프라 장수명화계획”을 수립, 노후 인프라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함.

■ 일본 유지·보수 건설 시장 비중은 90년 중반 15%에서 최근 30%대에 근접

- 일본의 신설(新設) 공사 시장의 규모가 90년대 중반 이후 절반 정도 위축 되는데 반해, 유지·보수 공사 시장은 일정 수준을 유지함(<그림 2> 참조).
 - 신설 공사 시장은 1996년 70.3조 엔에서 2010년 33.0조 엔으로 위축됨.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4년에는 39.6조 엔으로 소폭 회복함.
 - 유지·보수 공사 시장은 1995년 12.5조 엔에서 1996년 15.9조 엔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2.4조원 까지 위축됨. 이후 점차 증가 해 2014년에는 15.3조 엔을 기록함.
-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공사 시장의 비중은 1995년 15.2%에서 점차적으로 증가, 지난 2012년에는 30.4%에 이르렀으며, 2014년에는 비중이 소폭 하락해 27.9%를 기록함.

<그림 2> 일본의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현황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공사시공통계. 주 : 완성공사 위주로 집계된 자료임.

■ 일본 노후 인프라 정비 강화로, 향후 유지·보수 관련 시장은 지속 성장 예상

-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노후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주요 정책 현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핵심 연구 사업에도 포함시킴.
 - 2013년 ‘국토강인화기본계획’에 ‘인프라 장수명화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2015년 일본 내각부 주도, 전후 국가가 주도한 최대 연구 프로젝트로 평가 받는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에도 인프라 유지·보수 항목이 10대 주요 프로그램에 포함됨.
- 결국, 일본의 유지·보수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노후 인프라가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박철한(책임연구원-igata99@cerik.re.kr)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해든 지나고 보며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2016년에는 대통령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영국 EU 탈퇴 등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제안하면서 보호무역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017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놓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16년 2.6%, 2017년 2.4%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17년도가 2016년 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4~30년 2.9%에서 2030년 이후에는 1.6%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축소, 자본투자 위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침체된 우리 경제의 현실로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골자로 하는 케인즈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케인즈안은 불황기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풀려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상태를 회복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통화주의자들과 논쟁이 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승수효과로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구축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1990년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400조 5천억원으로 이른바 ‘슈퍼예산’이라는 언론 보도

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은 지출과 수입이 균등한 균형예산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예산을 의미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재정적자를 감내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누적 수준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상의 경제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재정을 어느 부문에 사용해야 하는가. 먼저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서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꼭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분야, 지진·가뭄·홍수·해노후화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즉, 산업 및 지역 간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격동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경제는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이 지나치게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서민경제가 붕괴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아주경제 1.11>

박용석(산업정책연구실장 · yspark@cerik.re.kr)